

전기차 충전 유료화 “시장 성장 저해”

환경부 4월부터 시행...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보급 적극 장려 기조와 배치” 논란 야기

정부의 전기자동차 충전 유료화 시행이 시장환경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전기차시장 자체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 유료화를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인 337기의 급속충전기에 kWh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 등으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쏘울 전기차를 310대, 레이 전기차를 19대 판매했다. 전체 판매량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497대, 60대를 판매했던 데 비추어 오호러 더 줄어든 실적이다. 르노삼성차의 전기차인 SM3 ZE 역시 지난해 상반기 259대를 판매했던 것보다 적은 212대를 올해 상반기에 판매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요금 유료화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정책과는 달리 영업적 측면에서 무료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부터 BMW, 이마트 등과 협력해 전국 이마트에 100여곳의 충전소를 구축한 것을 비롯해 현대차와도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호차 전달식. 현대자동차는 최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1호차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내영업본부 장재훈 전무가 아이오닉 일렉트릭 1호차 주인공 정희원씨, 배우자 조유리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력관계를 맺은 포스코ICT의 경우 현재 충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향후 운영주체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는 이용자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롯데렌터카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여전히 자사가 충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오히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유료화를 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

이 있다.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료화를 안 하면 좋다. 2014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원래 2015년부터 유료화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년 4개월이나 늦춘 것”이라며 “(향후 충전사업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유료화 강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직 전기차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시장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인프라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게 관련업체들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직 전기차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시장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일자리창출(38.4%), 물가안정(20.2%), 경제성장(14.8%), 경제민주화(9.3%), 복지확대(8.9%), 부동산화(4.7%), 가계부채 연착륙(3.7%) 순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은 “노후준비가 미흡하고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취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의 일자리창출 선호도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하려는 비취업자들의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정부는 고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응답

국민 76% “20대 국회 현안은 ‘경제 문제’”

현대경제연, 중요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 - 물가안정 - 경제성장 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의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0대 국회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6%가 경제 분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회문화(14.1%), 정치(6.0%), 통일외교안보(4.0%) 등을 지목한 응답자는 모두 합쳐 2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경제 분야 관심은 50대·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경제 분야 응답률은 20대가 67.1%, 30대가 76.7%, 40대가 78.7%, 50대가 80.7%다.

김동일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혼 비율이 낮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경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제 분야보다는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87.6%), 비

취업자(77.5%), 정규직(74.5%), 비정규직(73.2%) 순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 분야를 정책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해 매우 높다”며 “이는 지난 2013~2016년 사이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경제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응답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생보사, 사회공헌활동 5년간 5821억

‘그룹홈’ 등 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도

생명보험업계가 꾸준하게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회사는 지역사회·공익사업,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등에 최근 5년간 5821억원을 지원했다. 연평균 116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25개 생보사는 지역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탈북가정 어린이단체와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무료급식 제공, 명절맞이 독거노인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눔,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운영 등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각 사별 집행 금액의 합계는 643억원 규모다.

생보사들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국내 유명인의 재능 기부를 통해 연극공연, 청춘합창단, 음악회 개최, 현대무용 등을 지원했다.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실업배구단과 연계한 청소년 배구발전 지원, 테니스 보급 확산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도 힘을 보탤다.

지난해 17개 생보사가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 105억원을 투입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도 지원했다. 14개 생보사는 지난해 학술·교육 분야에 40억원을 집행했다.

또 재난과 내전 등으로 고통당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 난민이동 지원,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재건, 네팔 대지진 피해 지원, 베트남 희망나무 프로젝트 등의 사업도 시행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의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재단 출연, 힐링랜드 기부금 등을 조성했다.

이밖에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업계공동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협약에 참여한 19개 생명보험사는 지금까지 2919억원의 업계공동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은 고위목적과 운영주체를 3개 축으로 구분 저출산 해소와 미숙아 지원, 자살예방 지원, 금융보험교육 문화사업,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인터넷은행, 바로 본인이 신청 가능”

임종룡, “IT기업이 주도하려면 은행법 개정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은 겸영업무를 신청할 때 관련 준비금 1000억 원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이 신청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성남시 분당구 관교 카카오톡 본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내에 ‘인가심사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카드·보험·금융투자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갖춘다면 하반기 중 은행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에는 ‘여성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공유하게 해 시장에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진수 기자